

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



노동상담  
지금 클릭하세요

소식

성명·보도

공지사항

성명·보도

기타 공고

# [성명]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

작성일 2016.09.30    작성자 교육선전실    Views 2109

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세월호 참사 900일 성명

##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

**정부가 통보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시한인 9월 30일이다.**

정부의 의도는 사실상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겠다는 것이다.

선체에는 아직도 9명의 미수습된 희생자 시신이 있고, 304명을 수장한 세월호 침몰의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900일이라는 형극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.

원인불명의 침몰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묻을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.

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‘구조하지 않은 진실’과 ‘침몰의 진실’이다.

그러나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와 거부로 난관에 봉착해 ‘감추는 자 범인이다’라는 세간의 조롱거리가 나올 정도다.

‘침몰의 진실’을 밝힐 선체인양은 계속 늦춰지고 있고 심지어 이미 상당한 선체훼손이 되었다고도 한다.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**현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한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이후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.**

**10월 1일은 세월호 참사 900일이다.**

강제적인 특조위 활동 종료를 이유로 진실규명 활동이 중단되는 900일이 되어서는 안된다.

**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.**

정부와 국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. 야당의 역할이 크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.

민심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과제이다.

**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의 보장과 법적 권한을 가진 특검 도입, 온전하고 조속한 선체인양과 선체훼손 중단 그리고 선체 조사 보장 등이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.**

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동전의 양면이다.

국민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.

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마라. 국민을 화나게 하지마라.

2016년 9월 30일  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

List

02-2670-9100

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-2260

부설기관    민주노총 소개    오시는 길    이용약관    개인정보처리방침

(우)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
고유번호 : 107-82-08139  
Tel : (02) 2670-9100 Fax : (02) 2635-1134 Email : kctu@kctu.org

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

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